

‘참’ 지식혁명을 위한 공공도서관 ‘혁명’의 당위성

Public Library Revolution for the ‘Real’ Knowledge Revolution

이 제 환 (Jae-Whoan Lee)*

〈 목 차 〉

- I. 글을 시작하며
- II. ‘지식혁명’의 실체와 허상
 - 1. 지식혁명의 주창자는 누구인가?
 - 2. 그들이 말하는 지식혁명의 허상
- III. 지식혁명과 공공도서관
 - 1. 지식혁명과 서구의 공공도서관
 - 2. 지식혁명과 우리의 공공도서관
- IV. ‘참’ 지식혁명을 위한 공공도서관 ‘혁명’
 - 1. 첫 번째 과제 : 운영 주체의 의식혁명
 - 2. 두 번째 과제 : 기존 체제의 구조 혁명
 - 3. 세 번째 과제 : 사회구성원의 인식혁명
- V. 글을 마치며

초 록

지식혁명의 개념과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식혁명의 시급함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논리는 과연 참다운 지식사회의 건설을 위해 바람직한가? 문헌정보학의 학문과 현장은 ‘참’ 지식혁명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들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지식혁명의 목적은 ‘지식의 상품화’를 통한 일시적인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개인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튼튼한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참다운 지식혁명은 지식의 평등한 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인 공공도서관 혁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도서관 혁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철학과 논리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What is the concept and reality of so-called ‘Knowledge Revolution’? What is the philosophy and logic of the people who advocate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Knowledge Revolution in Korean society? Are their arguments rational and desirabl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is article deals with such issues from the socio-cultural point of view. The author argues that the ‘real’ purpose of Knowledge Revolution should be on the recovery of socio-cultural competitive edge rather than the temporary improvement of its economic competence, and that public library revolu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Knowledge Revolution. Also suggested are the macro and micro strategies and method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y revolution.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글을 시작하며

知識이 난무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知識이라는 用語가 어지럽게 춤추고 있다. 한 동안 情報가 범람하더니 이제 그 자리를 知識이 점차 대체하고 있다. 정보라는 용어가 범람할 때는 '정보화'가 우리 사회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처방이더니, 지식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보화'라는 구호의 약효도 어느새 시들해진 느낌이다. 이제는 '지식혁명' 혹은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처방을 들이밀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어색해졌다. 1990년대 초 '문민정부'를 표방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보화'는 국정 지표의 키워드였다. 그 덕에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종사하는 기관과 인력들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정보화' 대신 '지식기반의 확충'이 새로운 국정 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지식경영의 개념을 재빨리 수입하여 무장한 일부 경영이론가들과 그들의 매스컴 광대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시세에 따라 춤추는 '말의 잔치'를 바라보다 보니, 문득, 얼마 전 학술회의에서 만난 한 英國학자가 무심코 뱉어 내던 냉소어린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국은 벌써 지식사회에 들어섰나요? 영국은 아직 정보사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눈치와 처세는 성공의 어머니' 일진데, 정책담당자들과 컴퓨터학자들 그리고 경영이론가들과 일부 매스컴의 조금은 알팍한 기민성과 상업성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단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 뉘일지도 모르는 '케이크의 작은 조각'마저 빼앗기고 나니 공연히 심사가 뒤틀려서 하는 말이다. 아니, 한쪽에서는 '정보화시대'를 건너 뛰어 '지식기반사회'를 운운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칭 '정보유통'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푸념이다.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보선진국의 동료들이 제시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장밋빛 청사진에 미혹되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의 도서관도 '지식혁명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나와 내 동료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껏 꿈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IMF체제라는 경제위기'와 그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의 칼날 앞에 내 학문과 현장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한꺼번에 밀려드는 자괴감과 당혹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한숨이다.

이 짧은 글은 이러한 푸념과 한숨이 계기가 되었다. 도대체 정보선진국의 미래학자들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 주창하는 '지식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도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졌다. 그들이 말하는 '지식혁명'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은 과연 향상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끝자락에, 과연 우리 문헌정보학의 학문과 현장은 '지식혁명'이라는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고민스러웠다. 그토록 중대한 사회변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식의 관리자요 중개자'임을 자처해온 '우리'는 왜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지 당혹스러움이 밀려 왔다. 그러다가, 바다 건너 도서관선진국의 동료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만 하는 것인지 차분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비록 짧은 기간의 고민이었지만, 그 기간 나름대로 느꼈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담고 있다.

II. '지식혁명'의 실체와 허상

1. 지식혁명의 주창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지식혁명의 주창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주창하는 지식혁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혁명의 시급함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주창하는 지식혁명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찍이 '지식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던 미국의 다니엘 벨이나 피터 드러커, 국내 출판물에 빈번히 인용되면서 '지식경영'의 대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일본의 노나카 이쿠지로,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보고서를 편찬한 바 있는 OECD나 World Bank, 그리고 '지식혁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홍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매일경제나 포스코경영연구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資源으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주체들이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같이 '경제적 관점'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익숙한 전문가라는 점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현상과 경영전략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주장하는 지식혁명의 내용도 사회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경제경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이들이 주장하는 지식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다니엘 벨은 말한다. "정보와 지식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자원이다. 앞으로의 경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자본과 노동이 아닌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Bell, 1973)." 피터 드러커는 보다 구체적이다. "지식은 이미 생산, 경쟁력, 경제적 달성에 있어 관건이 되었다. 다가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1권 제 1호)

는 21세기에 지식은 경제적 가능성이나 경제력의 기초이며 수단이 될 것이다(피터 드러커, 1998)." 노나카 이찌부로는 보다 특정적이다. "기업의 성패는 지식경영에 달려있다.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직하여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게 하는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이다(노나카 이찌부로 & 콘노 노부로, 1998)." 한편, OECD는 1996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지식기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OECD, 1997). World Bank 또한 1998년 세계개발보고서의 테마를 'Knowledge for Development'로 잡을 정도로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경영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환과정을 '지식혁명'이란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World Bank, 1998). 이처럼, 이들의 관점에서 지식혁명은 '지식경영'이나 '지식경제'와 동일한 맥락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는 국가의 경제발전 작계는 기업의 경영전략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가 '지식혁명'의 당위성(?)을 전파시키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가시화되면서 IMF 체제가 시작되자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보고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매일경제신문사는 『부즈·앨런&해밀턴 한국보고서』를 펴내면서, 우리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로 진단하였다. 이듬해인 1998년 초, 매일경제신문사가 두 번째로 엮어낸 『맥킨지 보고서』는 그러한 지식격차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8월, 매일경제신문사가 세 번째로 펴낸 『지식혁명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범세계적인 지식혁명의 대열에 소속히 동참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 때부터, 조선일보에 의해 주창되어 우리 사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던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는 구호는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창하는 "산업화 정보화는 뒤졌지만, 지식화는 앞장서자"라는 구호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지식혁명을 주제로한 각종 출판물은 공무원과 회사원의 필독서가 되었고, 지식혁명은 이들이 주관하는 그룹 스터디의 단골 화두로 등장하였다.

시세 변화와 여론에 민감한 우리 정부가 이 중요한 '이슈'를 소홀히 할리는 만무였다. 1998년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제2의 건국'을 선언하면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을 주창하고 나섰다. 그는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경제의 체질을 '지식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항상 그러했듯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폭제였다. 이후, "정부는 지식정부, 기업은 지식경영, 개인은 신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고, '지식'을 주제로한 강연회가 사회도처에서 봇물을 이루었다. 대기업마다 지식프로젝트팀이 급조되고, 이들이 앞다투어 펴내는

‘지식경영’의 이론과 방법 그리고 성공사례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다. 마침내, ‘지식기반의 확충’은 1999년의 5대 국정 지표 중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 바람은 그해 2월 제2건국위원회가 21세기형 한국인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신지식인 운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절정에 달했다.¹⁾

나는 이 글을 통해 현 정부와 일부 매스컴이 선도하고 있는 ‘知識化 運動’의 긍정적인 취지를 폄하하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다. 나는, 근자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선진국들과의 지식격차에 있다고 진단한 여러 보고서들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지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그들이 제시하는 지식격차의 완화를 위한 처방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특히, 그들이 ‘시급함’을 주장하는 ‘지식혁명’의 목적과 실천 방안이 과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치유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주창하고 매스컴이 앞다투어 선전하는 ‘지식경영’과 ‘신지식인 운동’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있어 ‘지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자.

2. 그들이 말하는 ‘지식혁명’의 虛像

지식경영 예찬론자들에 의하면, 지식경영이란 “지식경제시대에 조직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의미한다(매일경제, 1998 & 1999). 이처럼, 지식경영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하여 서로 공유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조직의 생산성 증대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는데 있다. 그들은 지식(knowled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지식의 개념보다는 차라리 일상적인 의미에서 쓰는 노하우(know-how) 혹은 아이디어(idea)의 개념에 근접해 있다. 신지식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신지식인을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개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피터 드러커가 지식의 개념을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또한 현 정부에 의해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개그맨 출신 영화제작자 심형래가 방송에 출연하여 유행시킨 “못하니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니까 못하는 것입니

1) 신지식인 운동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매우 확고해 보인다. “신지식인사회 실현”은 2000년도 국정지표의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라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말과도 동일한 뿌리를 갖는다.

지식, 특히, 문제해결에 필요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늘어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업이나 국가 경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지식경영’과 ‘신지식인 운동’의 목적이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에 치중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협한 접근은 이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의 본질’과 ‘지식습득의 목적’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지식경영’과 ‘신지식인 운동’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모토는 ‘생산적 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성공은 지식경영의 목적이자, 신지식인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신지식인이 되려면 세상 변화에 둔감한 채 한 가지 일에만 평생토록 몰두해서는 곤란하다. 돈 안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차라리 어리석다. 기초 이론에 대한 연구나 교양을 쌓기 위한 학습보다는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재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신지식인의 대열에 하루라도 빨리 합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적 지식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조직의 성공은 보장된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경영론’이나 ‘신지식인 운동’을 주창하는 이들의 말처럼,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가? 생산성 특히 경제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일까? 다시 말해, 실용적인 지식, 도구적인 지식, 돈이 되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이나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지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물론, 더불어 사는 공생의 가치보다는 자유경쟁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지식은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은 투자의 개념에서 필요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물질적인 측면을 뛰어 넘어 정신적인 측면의 삶의 질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면, ‘상품가치’가 있는 지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지식의 습득이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사회의 건강한 변혁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쯤에서 잠시 지금의 ‘지식혁명’에 앞서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되돌아보자. 우리의 리더들은 정보혁명을 정보매체의 혁명으로 보았고, 정보화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보고속도로라는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PC 보급률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율은 정보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듯 하드웨어의 성장만을 놓고 보

면 우리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하드웨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헤쳐 보면, 정보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된다. 정보선진국에 대한 정보의존도는 오히려 증대하였고, 국내의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의 정보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지는 않았는가? 특히, 정보기기의 대중적 보급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한 것은 아니던가? 만약 실상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보화였던가?

동일한 의문은 ‘지식혁명’의 시급함을 부르짖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던져진다. 무엇을 위한 지식혁명인가? 나는 자유는 인간의 속성이지만, 평등은 사회적 요구라고 믿고 있다. 자유경쟁을 모토로 하는 자본주의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결국은 잡아먹고 말았듯이, 인간에게 평등은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운 이념이요 무리한 요구였는지 모른다. 평등이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개념이었기에 의도적으로라도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우리는 만들어 왔는지 모른다. 자본주의에 근간한 산업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건설을 구호로 삼으며 나름대로 ‘평등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정보사회에 대한 예견이 한창 유행할 때, 서구의 진보적 사회학자들은 ‘정보사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가 동시에 보장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그 구성원들 사이에 이와 같은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된 발전된 형태의 민주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계층간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역사는 그들의 예견이 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지식사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바람처럼, 지식혁명의 목적이 지식의 상품화와 그를 통한 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어진다면, 현존하는 계층간의 지식격차는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수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지식을 독점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진짜 ‘혁명’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지식혁명의 목적은 ‘지식의 상품화’가 아닌 ‘지식의 대중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혁명은 지식의 상품화를 통한 일시적인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튼튼한 사회 경쟁력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처럼 지식인프라가 취약한 사회에서는 지식인프라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개발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토착적인 지식자원의 개발과 지식자원의 체계적인 유통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보통 사람을 지식화’하고자 하는 운동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신지식인’ 운동보다 시급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허약한

지식인프라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혁명’을 하고자 하는지 나는 묻고 싶다. 산업선진국들처럼 생산해 놓은 지식자원이 방대하고 구축해 놓은 지식인프라가 견고하다면, 지식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처럼 토착적인 지식자원은 물론 ‘개인의 지식화’ 나아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경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서두르고 신지식인이 되자는 구호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개인의 삶의 질은 젖혀두고라도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과연 강화될 것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Ⅲ. 지식혁명과 공공도서관

1. 지식혁명과 서구의 공공도서관

인간의 삶에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가? 歷史에 대해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역사가 지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지식은 개인과 조직 나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한 동인’이었다. 지식이 사회변혁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동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식의 대중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지식의 생산과 소유가 특정 그룹에 제한되어 있던 시절에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한 계층적 사회질서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생산과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사회체제는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체제로 급속히 진화하였다. 지식은 오랫동안 사회변혁, 특히, 정치적 권력이동의 동인이었다. 나는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은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의 확산, 그리고 러시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혁명을 ‘지식의 대중화’가 가져온 사회변혁의 과정이요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식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권력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자원이었다. 산업혁명의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적 지식’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고, 이후 자본주의의 확산 과정을 통해 ‘생산재’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서구 산업사회의 리더들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소수의 지식화’보다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지식인프라의 강화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식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시민의식의 확산’과 신분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

나 평등하게 지식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보았다. 특히, 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신분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보통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자원에 접근하여 ‘지식화’를 성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마련은 더욱 절실해 졌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로서 그들은 공공도서관을 고안해 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가지지 못한 자(have not)’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만들어 졌고,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평등의 구현’은 이들 공공도서관의 존립 근거이자 목표였다.

서구의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평등한 보급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회 장치’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감축이라는 시련에 봉착했을 때도, 정보기술혁명의 바람이 그들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도, ‘지식의 상품화’가 그들의 존립을 위협하기 시작했어도, 그들은 굳게 버틸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전개하였고, 그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들은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지식혁명은 지식의 대중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과 논리로 맞서 왔다. 그들은 지식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상품화 현상과 그로 인한 계층간의 지식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의 전진기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활발한 PR과 로비를 전개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주민과 정부)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2. 지식혁명과 우리의 공공도서관

이제 이쯤에서 논의의 중심을 우리의 공공도서관으로 옮겨보자.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지식혁명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 도처에서 메아리치는데, 서구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다. ‘지식기반의 확충’이 국정지표가 되어 있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그 누구도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지식인프라의 구축이 실천 과제가 되어 있지만, 지식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공공도서관은 빠져 있다. 그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일지 모른다.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구조조정의 바람과 함께 예산은 삭감되고 인력은 감축되고 있으며, 심지어 운영주체와 명칭마저 하나둘씩 바뀌어 가는 상황에 몰려 있

다. ‘도서관사람’끼리 모이면 ‘대중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관리기관이요 유통기관’이라고 자부하던 공공도서관이 ‘지식기반의 확충’이 국정지표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 ‘번성’이 아닌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진데도, 과묵한 탓인지 나는 아직까지 ‘지식기반의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우리 공공도서관계의 인사가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²⁾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 도서관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분명히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이요 ‘지식사회의 중요한 전진기지’인데, 왜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오랜 고민 끝에 근자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원인을 하나둘씩 깨달아 가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무시’당하는 원인을, 공공도서관이 등장하게된 사회적 배경에서 보게 되었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에서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도서관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사회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필연적’으로 생긴 기관이 아닌 정책담당자나 행정가들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는 설립 배경을 주시하게 되었고, 그렇게 설립된 기관을 ‘사회 평등의 구현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복지기관’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또하나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정기관’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주시하게 되었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이 상부기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주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논리,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 어느 것도 우리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님은 ‘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맹장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효율성을 앞세운 경제논리와 기술중심주의

2) 2000년 2월 초순부터 우리 도서관계의 일부 인사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모 방송국에서 우리의 도서관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였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자기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계의 유력한 인사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수도권의 저명한 문헌정보학자들과 학회와 협회 관련 인사들이 갑작스레 분주해 졌다는 풍문이 이곳 부산까지 들린다. 바람직한 일이며, 좋은 기회이다. 단지, 행정 관료들이 아닌 도서관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 도서관의 부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공과를 다루는 행정관료들의 ‘보캅’에 부응하여 형식적이고 전신행정적인 ‘보고서’들을 짧은 기간내에 만들어 내는 우만은 제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도서관계에 찾아온 모처럼의 ‘기회’가 아니던가!

적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목청 높여 부르짖는데 소홀하였고, 무지한 정치가와 행정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데 소극적이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는데 수동적이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정한 ‘도서관계’라는 자그마한 울타리 안에 안주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우리의 공공도서관을 논의하고 운영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에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어 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차라리 무심하였다.³⁾

우리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겪고 있는 고난과 좌절의 직접적인 책임을 냉철히 분석해 보면, 그 화살의 끝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사서들에게로 돌아간다.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사서들의 의식과 행태에 ‘현재의 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다수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이, 그저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루벌이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 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갑게 그들의 의식과 행태를 질타해 왔다. 그로 인해 그들로부터 무수히 비난도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은 그들의 무지와 무신경 그리고 나태함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나는 우리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의식 속에 자신의 기관과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회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끌어내고자 하는 욕구, 나아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自我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잡지 못한다면), 운이 좋아 관련 법이나 제도가 그들의 바람대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우리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지식 평등의 구현을 위한 지식사회의 전진기지’로서 인정받는 날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도서관문화가 척박했던 이 땅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렵게 공공도서관을 세우고 지탱해온 도서관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마저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그들의 노고 덕택에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이나마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니던가? 다만, 세상을 보는 우리 도서관계 리더들의 눈높이가 너무도 미시적이고 한정적이다 보니 거시적인 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고 보편적인 도서관문화를 이 땅에 심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는 아쉬움과,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사서들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현실안주적이다 보니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발전은 커녕 자신의 밥그릇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피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비록 늦기는

3) 물론, 근자에 들어 몇몇 헌신적인 도서관선배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자그마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공공도서관을 ‘우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자는 법과 제도의 개혁 운동을 통해, 우리는 ‘전문직 관장제’라는 전리품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던 것도 잠시 뿐, 그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절치부심하고 있던 ‘힘있는 자’들로부터 역습을 당해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까지 몰려 있다.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만회할 기회는 남아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현실을 조금은 냉철하게 들여다보고자 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으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아가, 지식혁명의 과정에서 '지식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개별적인 단위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계 나아가 도서관계 전체 차원에서 동시에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⁴⁾

IV. '지식혁명' 그리고 공공도서관 '혁명'

나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지식혁명은 '공공도서관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식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개인의 지식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사회 평등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사회적 장치가 공공도서관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지식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한 '혁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혁명'은 자신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주체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공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우리 공공도서관이 자신의 비천한 태생과 미약한 능력 그리고 나약했던 의지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위상'을 철저히 반성하고자 할 때, 그 동안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열정을 구현하기 위한 명료한 철학과 합리적인 방법을 갖추하고자 할 때, '공공도서관 혁명'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정책담당자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때, 공공도서관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 공공도서관 혁명은 이렇듯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의식혁명'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 (즉, 정책관련자들과 일반 시민)의 '인식혁명'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혁명은 어디서

4) 이 노력에 도서관계 전체가 나서야 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공공도서관이 맞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공공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 그리고 명칭과 운영주체의 변경 등의 문제는 대학도서관도 학교도서관도 동시에 겪고 있는 도서관계 전체의 시련이다. 가령, 명칭변경 문제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을 학술정보센터로 학교도서관을 학교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

1. 첫 번째 과제 : 운영 주체의 ‘의식혁명’

지식혁명시대에 공공도서관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이 자신의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즉,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지식화’ 그리고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사회적 장치이다. 즉, 공공도서관의 존립 목적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평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 사이의 지식과 정보격차를 완화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목적에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지역 사회에 유용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지식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지식화를 위한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신분이나 사상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식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한 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 운영 주체인 사서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경제논리와 기술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이요 평생교육기관이며 복지기관인 공공도서관은 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철학과 논리를 갖게 된다.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자질의 개선이다. 나는 공공도서관이 매사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소명 의식이 가슴에 불타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도, 공공도서관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극적 사고와 수동적 행태에 익숙한 사람들로 공공도서관이 채워져 있어서는, 혁명은 고사하고 작은 전투에서도 승산은 없다. 가슴은 불같이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며, 안목은 거시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도서관을 채워야 한다. 우리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이제 더 이상 공공도서관의 서고 한편에 움츠리고 앉아서 세상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푸념하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잘못된 의식과 행태

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문제를 도서관계의 문제로 국한하고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미시적인 안목도 이제 그만 버려야 한다. 지식혁명의 본질을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공공도서관 문제를 '지식평등의 구현'이라는 이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소명 의식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만으로 공공도서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필요한 것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공공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권위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고유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내린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힘들어진다. 어차피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은 사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에게는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가령,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능력은 기본이고, 다양한 정보매체와 기기의 조작 및 활용 능력, 도서관 자원과 주민의 요구를 연결하기 위한 능력, 개인의 지식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능력, 그리고, 지식의 평등한 보급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중심적 마인드 등은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에 더해, 지식혁명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에게는,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력, 관련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한 교섭력과 홍보력, 그리고 새로운 고객의 창출을 위한 마케팅 능력 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능력'이다.

의식개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해,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존립 기반이 되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의식과 행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거시적이고 동시에 미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표출된 요구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요구까지를 면밀히 도출해 내어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고유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중앙의 행정기관이나 지역의 상부기관이 부여한 기능을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토착적인 기능을 개발하여 특성화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가령, 고소득층 혹은 고학력층이 모여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라면 고급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혹은 저학력층이 모여 있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라면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층이 주 고객인 공공도서관이라면 뉴미디어 형태의 자료 확충이, 노인층이 많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라

면 인쇄본 형태의 자료 확충이 보다 절실할지 모른다. 이렇듯, 지역 주민의 삶의 형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요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비중을 갖고 수행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존립 기반 강화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공공도서관이 그 동안 소홀히 해왔지만 지식혁명시대에 더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 ‘지식평등 이념의 구현을 위한 복지’ 기능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식과 정보혁명의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가 개인재 혹은 그룹재화 하는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의 지식과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정보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다. 이러한 시점에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고정적인’ 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공공도서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분과 사상 그리고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가진 자’들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재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평등 이념’의 근간이고, 그러한 이념을 지식과 정보의 재분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데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도서관의 관심은 당연히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주어져야 한다. 어차피 만인을 위한 만인의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론에 불과하다면, 서비스 대상 주 고객층을 선정하여 고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열악한 존립 기반을 가진 우리 공공도서관의 위상 확립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지도 모른다.

2. 두 번째 과제 : 기존 체제의 ‘구조혁명’

지금까지 논의해온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주체들의 의식과 자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은 모두 ‘혁명’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공공도서관 혁명이 성공하려면, 공공도서관의 존립과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 즉, 정책담당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공공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나아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장치임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존립과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자 그룹이 공공도서관의 ‘효율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 공공도서관의 '구조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다. 공공도서관의 구조개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감히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현단계 공공도서관의 '구조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설립 단위에 대한 조정, 조직구조의 개편, 그리고 인력의 재정비를 통한 전반적인 경영구조의 혁신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효율성이 모든 조직의 평가를 위한 주요한 잣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만이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목적은 "지역 주민의 지식화를 통해 개인 그리고 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일상에 다가가야 한다. 아니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위치와 설립 단위이다. 만약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위치와 설립 단위가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위치와 설립 단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단행하여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출판물의 유통구조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시기에 출판물의 일차적인 유통을 담당하는 서점가에는 중요한 구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형 서점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변두리의 소형 서점들의 폐업이 줄을 이었다. 여기까지는 생존을 위해 대형화를 지향하는 물류 기관들의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할 지 모른다. 그러나 소형 서점들이 폐업한 자리를 도서대여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도서대여점의 확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한 지식의 상품화 현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동시에,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 특히,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위치와 설립 단위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밀접하게 다가갈수록 재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려면, 대도시의 구나 중소도시 혹은 군 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현재의 설립 구조는 '소수의 대형화'와 '소형화된 다수'의 이중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그 지리적 위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자리잡아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기관인 은행들이 기존의 대형 점포들을 과감히 줄이고 동네 단위의 소형 점포와 ATM(자동입출금기)을 늘려가고 있는 이유를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은행들의 목적은 고객에게 보다 밀접히 다가가는 것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동시에,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물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영의 효율화'와 '고객의 확대'가 공공도서관의 존립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과제라면, 이웃의 성공 요인에 대해 애써 모른 채 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공공도서관도 변해야 한다.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거점 역할을 할 공공도서관은 대형화하되, 동네 단위의 소형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

몇 십억에서 몇백 억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공도서관 하나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몇 년을 허송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예산과 인력이면 (운이 좋아 공공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은 더욱 줄어들지 모른다),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주민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나는 이렇게 될 때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밀접히 다가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⁵⁾

설립 단위에 대한 조정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조직구조 또한 개혁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복지기관 그리고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역 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의 조직구조는 새롭게 변화하여야 한다. 먼저, 자료의 관리 기능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보서비스와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확충이 시급하다. 도서관전산화는 공공도서관의 제한된 전문 인력을 보다 부가가치적인 서비스에 재배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료의 수집과 조직 그리고 관리에 종사하던 전문 인력 중에 다수는 이제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일선 창구로 배치되어야 한다. 고객과의 일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참조서비스 창구는 공공도서관의 얼굴이다. 이 장소에는 당연히 '베테랑' 사서가 배치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뜨내기 고객은 고정 고객으로 바뀌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조직구조의 개편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또하나의 과제는,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대외협력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다. 지금처럼 유사한 역할과

5) 사실, 우리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동도서관'은 우리 주변에 있었고, 이 '장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지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 '이동도서관'이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 내고 있는데,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기왕에 가지고 있던 '고객 확보를 위한 훌륭한 장치'마저 스스로 방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문성과 현장성에 있어서 우리 문헌정보학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학 분야가 오늘날 새삼스럽게 '각광'을 받고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 지식과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산동네건 변두리건 가리지 않고 찾아나서서 지역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누가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가늠이 볼 것인가! 우리 공공도서관 사서들도 필요하다면, 등본집에 책을 가득 짊어지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산동네건 아파트촌이건 시장거리건 공사판이건, 그들과 그들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에 가만히 앉아서 열람실을 공부방으로 빌려주는 역할은 독서실 직원의 일이지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아니지 않는가? 데스크에 가만히 앉아서 이용자가 가져오는 책에 도장이나 찍는 일은 서점 주인이 할 일이지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아니지 않는가?

기능을 가진 조직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직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기획 능력 그리고 PR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번성'은 커녕 '생존'을 보장받기조차 힘들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공공도서관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공공도서관 내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대처하는' 기능을 가진 전담 부서가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깨달아야 한다. '머리'가 없는 조직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

기존 부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구조혁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며, 따라서, 인력의 재정비는 구조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당연히 사서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서들이 우리 공공도서관에 과연 얼마나 포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적인 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의 지식화'를 위한 이용자교육은 현장 사서들의 재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경영전략의 수립, 새로운 사업의 기획과 집행, 그리고 대외협력과 마케팅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기능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앞서 언급한 '사서직 전문직 관장' 문제가 공공도서관계의 최대 이슈였을 때, 나는 소수파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먼저 생각하였다. 우리 도서관계에 '사람'이 있는가? 행정력은 기본이고 창의력과 기획력을 갖춘 인재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홍보전문가는 있는가? 우리에게 마케팅 전문가는 있는가? 우리에게 대외교섭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공공도서관 정책을 주물러 왔던 노련한 행정직과 정책담당자들 그리고 입맛이 무척 까다롭고 불평 삼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고객들의 공격과 비난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브레인 그룹'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혹자는 주장할 지도 모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지 '도서관사람'의 순수한 혈통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지, 선부르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가는 '도서관가문'의 대가 끊기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여기서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사서 자격증'은 물론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많은 수의 우리의 '혈통'마저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변에는 뜻과 능력은 있어도 관료주의의 높은 담 앞에 좌절하여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수한 '도서관혈통'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혹은 관련 대학원에서 도서관의 경영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우리의 혈통만이라도 공공도서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실천의지를 우리의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열악한 위상을 빠른 시일내에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장 사서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서관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혈통 중에서 능력을 갖춘 이들을 과감히 발탁하여 우리의 도서관현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능력을 갖춘 親子가 부족하다면 養子라도 들여 ‘가문’의 보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심지어, 공무원 사회에서 폐쇄성이 짙던 국방부나 경찰청 그리고 국가정보원 같은 부서에서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일반인을 영입하여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도서관만이 예외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공공도서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영세한 인력 시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경영과 행정 능력을 갖춘 인재, 기획력과 집행 능력이 우수한 인재, 대외교섭과 마케팅에 뛰어난 인재, 정보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탁월한 인재들이 공공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들을 우리의 현장으로 모셔와서 ‘도서관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사서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도서관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지금이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영입을 위해 도서관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다시 개혁해서라도 인재의 영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공공도서관 내에 관료주의의 폐쇄성이 그대로 존속해서는, 공공도서관의 혁명은 요원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리더와 브레인들은 ‘공공기관의 인력개방과 민영화’를 관료주의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뿌리뽑을 수 있는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지만, 인력 개방과 민영화의 ‘논리적 타당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보통 사람이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공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혹은 공공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적 자격’은 없더라도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흐름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우리 공공도서관은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되어있는 ‘민영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의 개방’ 특히 ‘개방 임용제’의 조속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친자가 되었건 양자가 되었건) 과감히 영입하여 지식혁명시대에 걸맞는 ‘효율적 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변화와 압력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보다 강화될 것이고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민영화’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은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3. 세 번째 과제 : 사회구성원의 '인식혁명'

앞서 나는 공공도서관 혁명은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관련자들과 주민의 '인식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운영 주체의 의식혁명과 기존 체제의 구조혁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 지원은 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정책관련자들과 주민의 인식혁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공공도서관이 닦쳐있는 '위기'의 시급성과 가용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성이 큰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정책담당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PR 활동이며, 둘째는 새로운 차원의 공공도서관 운동의 전개이며, 셋째는 도서관 사람들의 '정치세력화'의 실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계 나아가 도서관계 전체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비로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 관한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다양하다.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과 중앙의 언론매체,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등이 모두 공공도서관 정책 수립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공공도서관이 전개해야할 PR 활동의 대상이 된다. PR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때로는 설득이 때로는 협조요청이 때로는 홍보가 때로는 압력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공공도서관에 PR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PR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설득과 홍보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PR 활동을 전개할 때 설득과 홍보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될 때, 그들은 존립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또하나의 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자원봉사체제의 확립은 주민들의 인식만 바뀌면 당장에 현실적으로 가능해 진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고려해 볼만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도서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자.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구성하자.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나 의회 혹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함부로 무시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안은 지금까지의 '공공도서

관 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동의 필요성은 그 동안 문헌정보 학계나 도서관 현장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주창되어 왔기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 지역 단위의 공공도서관 모임에서는 비록 한정적인 규모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이 벌여온 대부분의 운동은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도서관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있다면, 이 운동이 도서관 사람들끼리의 폐쇄적인 운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⁶⁾ 공공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이며 이념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식 평등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따라서, 공공도서관 운동은 ‘지식 평등의 구현을 위한 시민 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한 한 차원 높은 운동의 전개를 통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 복지전문가, 사회운동가 같은 다양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공공도서관을 ‘지식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전진기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존립 기반을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지역과 중앙의 행정기관과 의회를 대상으로 ‘인식변화’를 시도하려면, 설득과 로비 그리고 압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설득을 위한 가장 좋은 무기는 논리적 타당성이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행태와 권력의 맛에 익숙한 이들에게 설득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다. 이때는 로비와 압력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로비와 압력은 ‘힘’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계가 그들의 입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그들이 느껴야 로비와 압력은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도서관 사람들의 정치 세력화’라고 생각한다. ‘정치 세력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 사람’을 직접 ‘고위 행정관료’ 혹은 ‘정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도서관 사람들을 지방의회에도 진출시키고 지방정부의 고위직으로도 진출시키고, 국회에도 진출시키고 중앙정부의 고위직에도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존의 행정관료들과 정치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우리 도서관계의 ‘조직화’된 힘이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있는 모습이어야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공공도서관계 나아가 도서관계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라고 생각해 왔다. 거시적인 관점에

6) 물론, 경상남도의 창원 지역처럼 ‘경남정보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도서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도서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관 운동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서 9,000개가 넘는 도서관에 12,000명에 이르는 현장 인력과 20,000명에 가까운 예비 사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도서관계가 그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⁷⁾

우리 도서관계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전국사서협회가 있다. 공공도서관만을 놓고 볼 때는, 도협 산하에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있고 지역별로는 사서들의 연구모임인 공공도서관연구회도 다수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계의 '공동체 의식'을 구현하는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 볼 수 있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인력 규모를 보면, 이 단체가 과연 우리 도서관계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단체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나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했을 때, 그 협소한 공간과 한 줍밖에 안되는 인력에 우선 놀랐다. 협회의 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영세한 살림의 표시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그런 영세한 규모를 갖고 그래도 전국적인 '대회'도 치르고 기관지도 발행해 내고 도서관 현장에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현지를 방문하고 사회 요로에 진정서나 의견서도 내고 하는 것을 보면, 관계자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뿐, 9,000개가 넘는 기관과 12,000명에 이르는 인력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의 규모와 역할이 어찌 그 정도에 그쳐야 하는지에 생각이 미치면, 머리는 뻗해지고 가슴은 답답해 온다. 도서관선진국인 미국의 도서관협회와 비교하는 것은 어차피 무리겠지만, 담당해야 할 책무에 비해 현재의 규모와 역할이 지나치게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무엇이 이 단체를 이토록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이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해온 사람들의 '작은 안목', 특히, '정치적인 안목의 한계'가 이 단체의 '영세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⁸⁾

그렇다면, 한국도서관협회는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먼저, 이 협회를 대표해온 역대 회장의 면면을 살펴보자. 도서관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계) 사람이 아니면 이 협회의 장이 되기가 무척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힘'을 가지려면 권력

7) 1998년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행한 '한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도서관 수는 9,361개이며 직원 수는 11,720명이다. 8,100여 개에 이르는 학교도서관을 제외하더라도, 1,200여 개의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이 있으며, 11,000명이 넘는 직원이 이들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만을 보면 330개의 공공도서관에 5,1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국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에 의하면, 1998년 11월 현재, 단체 회원인 도서관의 수는 1,041개이고, 개인 회원의 수는 1,572명으로 되어 있다. 개인 회원만을 놓고 볼 때, 각종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의 15%도 안되는 숫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도서관 사람들의 협조와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협회 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서관협회가 과연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권익을 대변해 왔는지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협회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안목'과 '힘'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모두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 재력 그리고 폭넓은 인간 관계가 필수적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찌 그 자리를 도서관계 사람으로만 채워왔을까? 흔해 빠진 전직 총리나 장관, 국회의원이거나 재력가, 하다못해 사회 인지도가 큰 명망가라도 초빙하여 그 자리에 앉혔더라면, 지금처럼 영세한 살림 규모만은 벗어 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자그마한 스포츠 단체들도 그들의 長을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인사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도서관사람’들은 어쩌면 그토록 폐쇄적이란 말인가? 그러니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어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시선을 실무진으로 돌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국가의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이 단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잘 눈에 띄이지 않는다. 도서관전문가는 그나마 눈에 띄이는데, 법률전문가, 기획전문가, PR 전문가, 재정전문가 등 협회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나 자문’의 형태로라도 전문 식견을 갖춘 이들의 참여가 있을 만도 한데, 예산 탓으로 보기에는 실무 인력의 영세성과 폐쇄성이 지나쳐 보인다. 이 협회의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시선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도서관 현장과 문헌정보학계 사람이 아니면 이 위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회장도 실무진도 위원회의 위원들도 ‘도서관사람’ 일색이다. 도서관 사람끼리 모여서 ‘그들의 협회’를 운영하고 ‘그들의 도서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는 세상이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충정과 열성’을 몰라준다고 푸념하고 한탄한다.

언젠가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한 강연에서 나는 우리 사서들의 폐쇄적인 사고와 근시적인 안목 그리고 정치력의 부재를 질타한 적이 있다. 특히, 나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작은 안목과 한정적인 역할을 다소 강경한 어조로 성토했던 바 있다. 그로 인해 한 동안 그 협회와의 관계가 결끄럽기도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에 당시 강연에서 행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여기에 옮겨 적는다.

“... 우리 도서관계에는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비전을 제시할 지도자도 사업을 기획할 참모진도 그리고 발로 뛰어줄 일선 소대장도,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비 인력을 포함해 30,000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가진 집단이면 국가의 웬만한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규모인데, 그리고, 정부의 금고에는 명칭도 생소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액의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국 도서관계의 대표적인 단체가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여 영세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희극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를 개방합시다. 회장도 유력 인사를 영입하고, 자문위원회도 새로이 만듭시다. 그래서 그 理事진에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 혹은 재력가나 사회명망가를 초빙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도서관사람’이 되게 합시다. 그들이 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아마 일년에 수십 억의 예산은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협회에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을 한 100명쯤 영입해서 우리 나라 도서관정

책의 리더와 브레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그 힘은 갈수록 커져 갈거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따라서 변화할 거고, 그러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사서가 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과로 몰려올테고..."

이 강연의 요지는 도서관사람들의 안목, 특히, 정치적인 안목이 커져야 한다는데 있었다. 나는 지금도 도서관계의 정치세력화는 '정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 나아가 도서관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요 열쇠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화' 작업은 사회구성원 특히, '힘 있는 자'들의 공공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들의 시각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의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공공도서관 혁명은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앞서 나는,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들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 현재의 비효율적인 설립단위와 경영구조는 자발적으로 혁신하여야 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이념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PR 활동과 한 차원 높은 공공도서관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주체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혁을 바란다면,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모든 개혁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들이 지금까지의 미시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태를 벗어나고, 거시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행태를 갖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시작되고 결실을 맺게 된다. 이처럼,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 혁명은 운영 주체들의 의식혁명이 씨앗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혁명이 열매가 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V. 글을 마치며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나의 지식과 경험은 일천하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내가 제기한 공공도서관 문제의 診斷과 處方에는 뜻내기의 어설피름과 편견 그리고 비현실성이 곳곳에 배어 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혁명’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는 이들의 어설피름과 편견 그리고 비현실성은 뜻내기 도서관학자인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기에 나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들이 지식혁명의 당위성을 선전하기에, 나는 공공도서관 혁명의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그들이 지식혁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식혁명의 ‘참 뜻’을 왜곡하기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혁명의 이념적 정의(ideological definition)’를 들먹였다. 혁명은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되고 의식의 변화로 결과한다. 그런데, 국가나 조직 나아가 개인의 생산성 증대 그것도 경제적 의미에서의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지식의 개념을 폄하하고, 그러한 지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지식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의 양식’이다. ‘정글의 법칙’이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오늘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원’으로서가 아닌 ‘마음의 양식’으로서의 지식이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마음의 양식을 보통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시공간을 넘어 인류가 생산해온 마음의 양식들을 선별하여 보존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존재한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고결한 사회문화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지식혁명이 21세기 인류에게 필요한 참다운 혁명이 되려면, 그 목적은 이러한 마음의 양식을 보다 평등하게 보급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주어져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참다운 지식혁명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이 점에 대해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참다운 지식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물질과 기술중심적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식의 수호천사’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강호규. “국내외의 지식경쟁력 강화 사례 및 시사점.” 《정보동향분석》 124(1998. 8) : 28-42.

김정근·장덕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 부산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사

- 서의 일상적 의식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1994) : 3-73.
- 김희출. “지식경영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9) : 199-231.
- 노나카 이쿠지로 & 곤노 노부로 (나상익 역). 『노나카의 지식경영』. 서울 : 21세기북스, 1998.
- 매일경제신문사 엮음. 『부즈·앨런&해밀턴 한국보고서』. 서울 : 매일경제, 1997.
- 매일경제신문사 엮음. 『맥킨지보고서』. 서울 : 매일경제, 1997.
-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두뇌강국보고서』. 서울, 매일경제, 1998.
-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지식혁명보고서 : 당신도 지식인입니다』. 서울 : 매일경제, 1999.
-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 21(1994) : 291-323.
- 밥 어셔우드 (오동근 역).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과정.”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9) : 255-294.
- 윤정기.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15(1998.6) : 7-17.
-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도서관》 53(1998 가을) : 3-46.
- _____. “한국공공도서관의 해체위기와 탈출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6) : 29-54.
- 이용훈. “구조조정 시기의 도서관과 사서의 나아갈 길.” 『부산도서관연구회 세미나자료집』 (부산도서관연구회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1999. 4). pp.25-48.
- 이제환. “지역간 정보불균형의 현황과 대책.” 《정보통신연구보》 7(1995) : 247-270.
- _____.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도서관학논집》 28(1998. 6) : 313-354.
- _____.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도서관학논집》 28(1998. 6) : 504-525.
- _____.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운명 : 어찌 살고자 하는가?” 『부산도서관연구회 세미나자료집』 부산도서관연구회 : 부산광역시립도서관, 1999. 4). pp.7-20.
- 포스코경영연구소 Knowledge Management Team. 『지식경영 : IMF 시대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서울 : 더난출판사, 1998.
- 피터 드러커 (이재규 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8.
-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서울 : 나남출판, 1998.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도서관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 - 생존에 대한 위협인가, 위상제고를 위한 기회인가?』 1998년도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 라운드테이블 자료집.
- 한국전산원. 『지역정보화사업 평가와 추진방안』. 용인 : 한국전산원, 1997.
- SK C&C & 유명만.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 서울 :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9.
- Bell, D.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1973.

Koenig, M. "Intellectual Capital and Knowledge Management." IFLA Journal 22(Nov. 1996)
: 299-301.

Miao, Qihao. "To be or not to be : Public Libraries and the Global Knowledge
Revolution." <<http://ifla.inist.fr/IV/ifla64/082-78e.htm>>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http://www.oecd.org/dsti/>>

Shera, J. *Foundations of the Public Library*. Chicago : The University Press, 1949.

Usherwood. "Public Libraries." In : Line, M. et al. eds. *Librarianship & Information Work
Worldwide 1995*. pp.79-101.

William, L. *Reinvention of the Public Library for the 21st Century*. Whitesides, CO : Libraries
Unlimited, 1998.

World Bank. *knowledge for Development*.

<<http://www.worldbank.org/html/fpd/technet/wdr98/world.htm>>